

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(8.14)

- 지금부터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.
- 수도권과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지 못하면 우리 경제가 “동맥경화”에 빠질 수 있습니다.
 - 지금 모든 자원과 인프라가 수도권으로 쏠리고 있습니다. “경제의 뿌리”인 지방으로 순환되지 않으면서 우리 경제의 성장 능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.
- 정부는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총력을 다하겠습니다. 지역경제를 반드시 살려 우리 경제에 “피가 통하도록” 하겠습니다.
 - 지난주 발표한 “지방살리기 상생소비”에 이어서 오늘 회의에서는 지방 건설투자 대책으로 숨을 불어 넣겠습니다.
 - 그 지역을 가장 잘 아는 지자체를 중심으로 지역발전 전략을 추진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 방식을 과감하게 바꾸도록 하겠습니다.
 - 아울러, 지역에 특화된 미래 전략산업에 대해 재정, 세제, 인력확보 등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.

[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]

- 먼저, 오랜기간 부진했던 지방의 건설경기를 되살릴 것입니다.
 - 세제 특례와 공공매입을 통해 지방 주택에 대한 추가 수요를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.
 - 1주택자가 지방에 두번째 집을 구입할 경우 세제 특례를 현재 인구감소지역에서 인구감소관심지역까지 확대하고 인구감소지역에서는 주택가액 제한도 대폭 완화*하겠습니다.
- * (양도·종부재산세) 공시가격 4 → 9억원 이하, (취득세) 취득가액 3 → 12억원 이하
- 비수도권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매입할 때에는 취득세도 한시적(~'26)으로 중과배제하고, 50%까지 감면합니다.

- 건설사가 신속히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
공공공사 절차를 개선하고 공사비 부담도 완화합니다.
- SOC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기준금액(총사업비)을
26년만에 500억원에서 1,000억원으로 상향하고,
평가 항목도 지역의 전략사업을 우대하도록 개편을 추진하겠습니다(26.上).

[지역 자율성 제고를 위한 지특회계 포괄보조 확대방안]

- 다음으로, 내년부터 지특회계 지자체 포괄보조금 규모를
3.8조원에서 10조원 이상으로 3배 가까이 확대합니다.
- 이를 통해 지자체가 사업과 투자규모를
자율적으로 선택하는 지역 맞춤형 투자를 촉진하겠습니다.

[유류세 인하 및 유가연동 보조금 지급 관련]

- 마지막으로, 최근 지정학적 요인 등으로 인하여
국제유가 변동성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,
- 8월말 종료되는 유류세 인하조치와
경유·CNG 유가연동 보조금을 10월말까지 연장해서
국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.
-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토부 장관님,
지방시대위원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.
(국토부 장관, 지방시대위원장 모두발언)
- 지금부터는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.